

해외동포를 겨냥한 초국가적 정책: 문화 정체성 형성, '세계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포'라는 개념

손희주(서강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재외동포 정책은 모국과 재외동포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양자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 결정, 활동을 가리킨다.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해서 한편으로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모국과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모국의 발전을 위해 재외동포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국가 발전에 재외동포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¹

1) 윤인진,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의 비교>, 《한국사회학》 제6집, 2005, 33~71쪽. 이 논문의 영어 번역문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학회에서 발표되었다. Yoon In Jin, "Comparis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licy of Overseas Korean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Diaspora and Strategies of Global Korean Network, Korea University, October 11, 2002.

1. 들어가며

남한 정부는 최근 해외동포법의 정책과 법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외 한인의 지위와 문화적 소속, 그리고 '같은 민족(co-ethnic)'이라는 뜻을 지닌 동포의 개념에 관하여 논의를 거치게 되면서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다. 더불어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역사적 경험도 한국학계와 언론에 등장하고 담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재외 한인들이 가진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국가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이들과의 연대를 확장하게 되었다. 첫 인용문에서 윤인진이 제안한 재외동포란 개념을 통해서도, 재외동포들에 대해 동일한 민족, 즉 동포로서 정치적, 비정치적, 학문적, 문화적, 경제적인 면에서 모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방 후 해외 이주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세계화, 한국적 문화 정체성의 추구, 그리고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동포'라는 개념의 규정이었다.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정책 수립의 과정은 단일 민족과 순수 혈통이라는 헤게모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해방 이후 "수난의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탈식민의 과제 속에서 재외 한인들은 개척자이자 외교관이자 미래의 자산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로 묘사되곤 했다.²

한국에서는 최근 디아스포라,³ 국제결혼 등으로 인종이 다양화되

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계 담론이나 언론 등에서는 민족국가의 단일성과 민족문화 정체성을 강조하는 재외동포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다문화라는 뜻은 여전히 민족국가와 민족문화를 유지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 문서들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대개 한국이라는 나라와 영토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어 마치 동일한 공동체인 것처럼 정의하고, 특히 이들과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주민들이 정착한 나라에서의 적응 혹은 동화 과정 속에서 민족의식, 문화, 언어,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왔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해외 한인 혹은 디아스포라는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자 모범적인 참여자로서 흡수된다. 즉 만주 지역의 재중 한인 그리고 연해주에 살고 있는 재러 한인의 경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북방 정치에서 비롯한 또 다른 민족통일주의로 수렴된다는 것이다.⁴ 이처럼 한국의 디아스포라 혹은 이민사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민족과 국가의 틀 안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논의의 맥락도 대개 민족문화, 시민권 자격, 그리고

2) Hijoo Son, "Casting Diaspora: Cultural Production and Korean Identity Constru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9), Chapter 1.
 3) 필자가 지칭하는 디아스포라란 "타국에서 소수 집단으로서 존재하는 이민자 집단으로, 타국에서 살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모국과 정서적, 물질적으로 연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Gabriel Sheffer, "A New Field of Study: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Gabriel Sheffer, ed. (London: Croom Helm, 1986), 3.
 4) Haksoon Kim, "The Emergence of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as a "New Frontier" for Koreans," in *Rediscovering Russia in Asia: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Stephen Kotkin and David Wolff, eds. (New York and London: M.E. Sharpe, 1995), pp. 302-311.

민족 정체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합적인 흐름, 다양성과 다문화적인 경향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이민자들의 디아스포리한, 즉 복합적인 경험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좀 더 열린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남한 내 문화적 정체성의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책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초국가적인 맥락 속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뜻을 가진 동포라는 개념이, 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하에서 국가적 개발과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쓰이는 개념의 뜻을 좀 더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문화적 정체성을 '본질적' 정체성과 '구성된' 정체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전자인 본질적(essentialist claim) 문화적 정체성은 동일한 역사적 경험, 민족의 선조, 그리고 언어, 인종과 같은 문화적 코드를 공유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며 지속적인 자아정체성을 제공한다.⁵ 이러한 본질적 입장의 정체성은, 새로 재건된 주권국가나 사회에 그 이전 시기와의 논리적 연결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탈식민 시기나 재건의 시기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왔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거시적 구조나 사회정치적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5) Stuart Hall,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edited by Jonathan RotheFord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90), pp. 222-237.

후자인 구성된(positioned claim) 문화 정체성은 현대적인 맥락에서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고 다시 표현한다. 따라서 이는 유동적이고, 공통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이점을 포괄해 재맥락화되는 것이다. 본질적 문화적 정체성이 지속적이며 진보하는 단선적 시간 선상(unilinear time)에 위치한다면, 구성된 입장은 다시시간적이고(multichronic) 단절된 시간의 개념 속에 존재한다. 형성화된 입장의 단절성과 파열은 역사적 기억, 환상, 향수, 서술 방식, 신화와 암시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 속에 형상화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해준다.⁶ 이러한 점에서 다시시간적인 논리 안에 존재하는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은 다수의 역사, 즉 사실적이고 상징적이며 물질적이고 형상화된 역사 속에서 작용한다. 이 글에서 다룬 한국 정부 측에서 만들어온 문화 정체성과 그에 대한 정책은 전자의 본질적 입장에 해당한다. 필자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문화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입장을 비평한다고 해서 후자인 문화 정체성을 구성주의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만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한 개인은 어떤 국가적 구조하에 포섭된 시민이며, 그 구조 속에서 그의 권익과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양면이 현실 속에 녹아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6) Stuart Hall, Ibid, pp. 225-228.

2. 해방 후 한국의 문화 정책과 문화 정체성 형상화

‘같은 민족’을 강조하는 전략은 해외 한인을 동포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국제적인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방과 분단 후 남한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 정책의 주요한 일부분이었다.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문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식민지화, 분단체제의 고착, 그리고 세계화 과정 등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추구되었다. 사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남한의 문화 정책에서 가장 큰 과제는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였다.⁷ 1948년부터 20세기 말까지 남한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정의하며 만들어나가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정책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임학순은 이러한 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한다. 1. 외침, 특히 식민 지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문화전통을 정의하던 단계, 2 냉전체제의 맥락 속에서 분단으로부터 기인하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친 단계, 3. 1990년대 세계화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열린 문화 시기(open culture period)”의 단계다.⁸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이 세 단계의 문화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필자는 이렇게 남한 사회에서 문화 정체성의 문제가 중시되어온 맥락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

7) Yersu Kim, Cultural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UNESCO, 1976); Haksoon Yim,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8, no. 1., 2002; 백익, <민주화 이후 한국의 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정치적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8) Haksoon Yim, 앞의 글, 37쪽.

문화 정책의 목표는 필연적으로 문화 정체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 많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유럽연합의 통합을 이룬 경우도 있는 한편, 미국 혹은 브라질과 같이 다문화 정책, 문화적 다양성의 열린 사회의 관념을 ‘멜팅 팟(melting pot)’의 개념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중국 다문화 정책의 경우 소수 민족 집단들의 문화 자산, 풍속을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단일성이나 주요 전통을 지향하고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문화적 정체성은 각지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에 따라 보존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20세기 전후 한국의 문화 정체성의 여러 요소들은 서양 문화의 급속한 유입, 식민지 시기에 ‘왜곡’된 한국 문화 재생, 남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대립 관계와 적대적 민족국가 정체성과 사상, 남한 문화 산업의 성장과 이에 동반된 세계화 및 트랜스내셔널 패러다임의 변화로부터 비롯되었다.

문화 산업의 형식은 경제적 영향과 정책으로 예술, 미디어 (텔레비전, 라디오, 출판, 음악 매체), 기술 매체 (인터넷2.0, 온라인 정보, 비디오 게임), 디자인, 기타 오디오 비주얼 매체들을 포괄한다.⁹⁾ 세계화 정책 시대 이전 대부분의 문화 정책은 반일, 반공주의, 그리고 반서양주의적인 입장에서 서 있었다. 서양 문화의 침략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상업화, 물질 만능주의, 폭력과 선정적 문화가 한국에 부정적

9) 여기에 쓰인 문화 산업이라는 개념은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맥스 포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규정한 ‘문화 산업’과는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문화 산업은 문화라는 개념 그 자체보다 문화 형태에 중점을 둔, 문화 상품이 아닌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중점을 둔 비평적 개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했던 ‘문화 산업’이라는 개념은 이론과 자본의 거짓 이분법을 비평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참조. Max Horkheimer and Theodor W. Adorno,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Continuum, 1944), pp. 120-168.

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되었고,¹⁰⁾ 외세 문화의 영향은 한국 전통문화의 윤리적 도덕, 자기수양, 영적인 삶에 위배되는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다.¹¹⁾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외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전통문화가 도덕성을 상실하거나 문화적 손실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문화를 ‘건전’한 문화와 ‘불건전’한 문화 두 종류로 구별하였다.¹²⁾

그러나 김영삼의 세계화(1993~1998)와 김대중의 햇볕정책(1998~2003)에서부터는 그전의 정책 전략과의 질적인 차이가 등장한다. 세계화와 국제화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남한의 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로 문화 상품들이 수출될 때 문화의 시장성과 이윤성이라는 면에서도 더욱 그러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시해야 하는 주요한 문화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광범위한 과제였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세계화의 과정인 동시에 ‘한국적’인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해방 후 대략 50여 년 동안 문화를 ‘건전’과 ‘불건전’ 문화 콘텐츠로 구별하여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그러나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의 전통문화, 즉 민속문화, 전통 음악과 예술 등을 포함하여 ‘고급 예술’로 분류되었던 것들만 지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대중적인 문화, 일상생활의 문화, 또한 일상에서

10) Yersu Kim, *Cultural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UNESCO, 1976).

11) Haksoon Yim, 앞의 글, 39쪽.

12) Haksoon Yim, 위의 글, 43~44쪽. 1948년에서 1993까지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열수를 참고할 것.

의 개인적 창의성과 자발적 정체성 형성을 장려하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김영삼 정부의 “새 한국의 창작”이라는 슬로건은 창의적 민족성의 계발, 지역 문화의 육성, 문화 및 관광산업의 진흥, 민족의 통일, 그리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표방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문화 창달 5개년 계획’ (1993)이나,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 계획’ (1996), ‘문화 비전 2000’ (1997) 등을 비롯한 기획들은 위와 같은 목표에서 추진된 것이었다.¹³ 지역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 광주가 1993년 한국의 첫 비엔날레의 현장으로 선택되었고, 같은 해 문화체육부 산하에 문화 산업국이 설립되었다.¹⁴

이러한 흐름은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 전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김영삼 문화 정책의 전략이 추구한 통로를 넘어서 문화 산업을 디지털화된 사회로 앞장세웠고 북한과의 통합과 교류를 보강했다. 김대중 정부의 통합적 문화 정책은 ‘국민의 정부 새 문화 정책’을 필두로 ‘문화 산업 진흥 5개년 계획’ (1998), ‘문화 산업 비전 21’ (2000), ‘콘텐츠 코리아 비전21’ (2001) 등과 같은 계획으로 대표된다.¹⁵ 아울러 2001년에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여섯 가지 주된 기술의 하나로 ‘문화 콘텐츠 기술’을 지정했으며,¹⁶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01년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콘텐츠

13) 백익, <민주화 이후 한국의 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정치적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참조.

14) 백익, 앞의 글, 136쪽.

15) 백익, 앞의 글, 153쪽.

16) 문화 콘텐츠 기술(CT, Cultural Technology), 생명공학 기술(BT, Biological Technology), 나노 기술(NT, Nano Technology), 환경공학 기술(ET, Environment Technology), 우주항공 기술(ST, Space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등의 미래 유망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6개의 첨단기술(6T)을 말한다.

츠진흥원을 창립하고 연간 예산 9천만 달러를 할당했다.¹⁷ 또한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통일에 대한 적극적 태도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졌다.¹⁸ 이처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창의적 사회를 장려하면서 한국의 문화 산업은 크게 성장했는데, 이는 무역 장벽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 산업이 국가 발전 및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한국의 문화 정책은 1948년의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이 끝나는 1993년까지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나,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 시대부터는 그 정책을 크게 전환하여, 적극적인 문화 콘텐츠 생산과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장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왔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국가 주도로 문화 산업을 진흥하는 단계에서 시장 주도의 창작 사회로 변동하는 과정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다. 니콜라스 가르햄(Nicholas Garnham)은 영국의 사례를 들어, 문화 산업(cultural industry) 단계로부터 창작 사회(creative society)로의 변화가 가진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국가 주도로 문화 산업을 진흥하는 단계로부터 시장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창작 사회로의 이행은 국가의 규제뿐 아니라 시장유통체제 조건의 변경을 비롯하여 자유무역체제의 각종 공적 규정들이 변화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¹⁹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남한에서의 ‘세계화’가 여전히

17) Shim Doobo, “Globalization and Cinema Regionalization in East Asia,” Korea Journal, Winter, 2006, p. 246.

18) Hakssoon Yim, 앞의 글, 46쪽.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로를 따랐기 때문에, 문화 정책이 시장 주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국가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3. 담론과 개념을 위치시키기: '세계화' 와 '동포'

1) 세계화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 담론이 정치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장에서는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세계화 정책이 한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위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외의 한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삼 정부는 호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직후 1994년 11월에 세계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²⁰ 그 당시 한국은 '시드니 선언(Sydney Declaration)' 이후 이러한 정책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부서를 재편성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는 개방된 경제와 무역 관계 그리고 국제관계를 통한 열린 혹은 자유무역을 말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세계화 정책은 일반적인 국제화라는 의미와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한국에서 세계화는 오

19) Nicholas Garnham, "From Cultural to Creative Industries: An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Creative Industries" Approach to Arts and Media Policy making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1, no. 1 (2005): 17. (http://pdfserve.informaworld.com/692631_770849120_713728697.pdf, accessed on 12 August 2008).

20) Samuel S. Kim, *Korea's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83.

히려 민족국가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며 해외 한인의 공동체조차 한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세계화 정책은 순수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재벌 간의 유착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수직적인 구조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²¹ 한국은 세계화 정책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혹은 APEC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지구적 교류 협력의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었다.²² 무엇보다 해외 각 지역사회의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²³ 세계화 정책은 영문으로도 *segyehwa*로 쓰인다. 김영삼 정부는 국민국가와 세계화를 연결하기 위해 세계화를 영문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연설을 통해 이 단어에 담긴 공식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세계화는 한국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⁴ 김영삼 정부가 표방한 한국의 세계화는 결국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한인들 혹은 한국 디아스포라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세계화의 기획 속에 포섭되었

21) Samuel S. Kim, *Ibid.*, p. 267.

22) 마침내 남북한은 1991년에 유엔(United Nations)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23) 예컨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Research Group for Global Korean Business and Culture)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재외 한인 대상 연구를 추구해왔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발간된 《디아스포라연구》제4호, 제5호, 제6호에 수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7월에는 '한민족 재외동포세계선교대회'가 열린다 (<http://www.diaspora2011us.com/#/home>).

24) Kim Young Sam, *Korea's Quest for Reform and Globalization: Selected Speeches of President Kim Young Sam* (Seoul: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The Republic of Korea, 1995), p. 273.

25) Ky?ngsoo Chun, "Policy for Five Million Overseas Koreans," *Korea Focus* 2, no. 6 (1994), pp. 59-65.

다.

한국의 세계화는 한국인들의 '탈지역적(deterritorialized)' 민족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세계화 정책의 전략은 시장 요구와 연결되는 만큼 해외 한인들과 모국과의 밀접한 심리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다.²⁶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적으로 좀 더 통합적이고 포용력 있는 단어인 '동포'라는 명칭이 '교포'보다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디아스포라라는 인적 자원을 이러한 새로운 국가 형성 담론 속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²⁷

다시 말해 남한에서 말하는 세계화와 민족주의는 서로 모순된 개념이 아니었다. 세계화는 민족주의적 요소들을 포괄하며 이뤄진 정책 전략의 개념이었다. 신기욱은 남한의 세계화 추진이 출발점에서부터 확실하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족주의자들이 세계화의 의미를 전유하고, 그로 인해 세계화에 대한 반응으로 오히려 민족 정체성이 심화되는 과정을 연구해왔다. 세계화의 조류가 국가 및 민족주의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신기욱은 세계화와 민족주의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⁸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국가란 동족의식에 기반한 민

족주의, 즉 혈통을 공통분모로 하는 민족주의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의식이 집단적인 일체감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²⁹

한국인의 집단적 일체감이 가지는 의미는 정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1993년과 1994년, 김영삼 정부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부문의 수석비서로서 재외동포 정책 담당자였던 정정욱(정종욱?)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사례다.³⁰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선거운동 당시 재외동포를 위한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기로 했으나, 대통령 당선 후에는 독립적인 부서 대신 청와대 안에 재외동포관(Office of Overseas Koreans)을 두었다. 이 기관은 외교 정책, 국가 안보, 국제 보안, 통일부의 네 부서와 함께 부설되었으며, 모두 수석비서인 정종욱이 맡게 되었다. 그는 "동포를 세계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존 모델로 상정했다. 따라서 그는 "재외동포의 자격은 국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³¹ 이는 재외동포를 탈지역화된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었다.

재외동포 정책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또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는 디아스포라를 모국과 연결시킬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의 선언서에서 시작된 이른바 북방외교(Nordpolitik) 정책은 국경을 넘어,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 즉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의 연대가 가능

26) Hyun Ok Park, "Segyehwa: Globalization and Nationalism in Kore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4, no. 1 (1996), <http://www.umich.edu/~iinet/journal/vol4no1/segyeh.html> (accessed January 22, 2002), 3.

27) Linda Basch, Nina Glick Schiller, and Cristina Szanton-Blanc, eds.,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Langhorne: Gordon and Breach, 1994).

28) Gi-Wook Shin, "The Paradox of Korean Globalization," Working Paper published by APARC, 1993 <http://ksp.stanford.edu/publications/20125/> (Accessed May 8, 2004).

29) Gi-Wook Shin, James Freda, and Gihong Yi,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in Divided Korea," *Nations and Nationalism* 5(4), pp. 465-484.

30) Chong-Wook Chung, "The Global Community of Overseas Koreans: the Chinese Koreans and the Korean Americans, a Vision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Fall/Winter (2000), pp. 107-121.

31) Chong-Wook Chung, 앞의 글, 108~109쪽.

해짐에 따라 계속되었다.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재외동포를 포괄하려는 정책을 펼쳐왔고, 특히 조총련과의 강력한 연대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에 반해, 남한 정부는 1980년대 후반까지 국가 건립과 경제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³² 그 이전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1948년에 ‘국적법’을 제정하여,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종료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남한 정부는 해외 한인들과의 연대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북한의 오래된 재외동포 정책의 힘을 견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냉전체제가 끝나고 1993년 첫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7년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창립되었다. 이 재단이 창립된 이후에야 재외동포 혹은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국가와 관련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5년의 ‘재외동포 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은 199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와 돈독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다. 이 방안에서는 특히 비자 요구 사항을 완화하여,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다.³³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 즉 중국과 구소련과의 관계에 있었다. 남한의 문화 정책과 이민 문제, 특히 조선족의 귀국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32) Hijo Son, 앞의 글, 129~156쪽.

33) Lee Chulwoo, “‘Us’ and ‘Them’ in Korean Law: the Creation, Accomodation, and Exclusion of Outsiders in South Korea,” *East Asian Law: Universal Norms and Local Cultures*, edited by Arthur Rosett, Lucie Cheng, and Margaret Y. K. Woo (London: Routledge Curzon, 2003), pp. 105-137.

논란은 남한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북방 외교를 선언하기 이전까지, 300여 명이 넘는 조선족이 제3국, 즉 홍콩 같은 나라를 통해 남한으로 입국했지만, 그들의 중국 여권에는 대한민국의 비자가 아닌, 임시 여행 증명서만 발급되었다.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정책 전환이 이뤄진 이후, 이렇게 임시 여행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은 크게 증가했다. 1988년에는 1660명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3만 6135명이 되면서 거의 스무 배나 늘어났던 것이다.³⁴

귀국한 조선족 중의 일부는 독립운동 유공자이거나 그들의 후손들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받고 모국으로 들어왔다.³⁵ 당시 남한 정부는 ‘국적 판정’ 과정을 개설하여, 이렇게 초청되어 귀국한 동포들에게 ‘영주 귀국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후 ‘영주 귀국자’의 지위는 점차 확대되어, 다른 범주의 조선족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직계가족의 친척, 한국 농촌 총각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 그리고 1985년과 1991년 사이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머무르기로 결정한 50여 명의 조선족 등에게도 영주 귀국자 지위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초대받지 않았으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은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³⁶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으로 입국한 조선족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국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동포들의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34) Lee Chulwoo, 앞의 글, 108쪽.

35) Lee Chulwoo, 앞의 글, 108쪽.

36) Lee Chulwoo, 앞의 글, 108 쪽.

이해해야 하며, 재외 한인들을 어느 범위까지 한국인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재외동포법 : 대한민국 국적의 정의

1990년대 정부 부서를 재구성하고,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재외동포를 다음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재외동포를 '재외 국민'으로 정의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지만 외국에 영주 거주하는 동포로 규정하였다. 남한의 합법적인 국적 소유자로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차이가 없었다. 둘째, 외국에 영주 거주하며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로 규정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재외동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질적으로는 크게 달랐다. '재외 국민'은 외국에서 살기는 하지만 고향과 가족, '집'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교민이라고도 부른다. 반면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에 살며 외국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해외 한인을 의미했다.³⁷

김영삼 정부는 1948년의 국적법을 계승하여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외환과 재산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재외동포의 문화적, 교육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창립했다.³⁸ 최근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시 한 번 부결되었지만,³⁹ 2009년 2월, 의회에서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에게 투

37) Lee Chulwoo, 앞의 글, 105쪽.

38) 김병천,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재외한인연구》 8, 1999, 317~358쪽.

표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240만 명의 동포, 즉 외교관과 같은 공무원, 해외에 파견된 기업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었거나 장기 비자를 얻은 사람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었다.⁴⁰

이처럼 1990년대는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문화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1990년대 말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다.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데에는 조선족의 '임시 여행자' 지위 그리고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4·29폭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남한 정부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과 미온한 대응에 그 배경이 있었다. 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재외 한인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되었던 것이다.⁴¹ 1999년 12월 3일에 제정된 이 법안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를 건립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또 다른 중요한 세계화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재외동포법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39) 이종훈, <재외동포 정책의 과제와 재외동포 기본법의 제정 문제>, 《입법조사연구》 249, 1998, 146~172쪽; Lee Chulwoo, 앞의 글, 109쪽.

40) "Overseas Koreans to be Granted Voting Rights," Korea Newsreview 29, no. 8 (1998); Ahn Hyorim, "Momentum Builds for Overseas Koreans' Suffrage," The Korea Herald (April 24, 2007), 4; Ahn Hyorim, "Voting Rights Belong to All Citizens," The Korea Herald (April 24, 2007), 4; "Voting Rights Granted to Overseas Koreans," KBS World, January 30, 2009, http://rki.kbs.co.kr/English/news/news_commentary_detail.htm?No=14753(accessed on February 30, 2009).

41) Lee Chulwoo, 앞의 글, 109쪽.

을 호적등본을 제시함으로써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구소련이나 중국의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으로 국적 취득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6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중에 절반이 넘는 240만 명가량이 국적 취득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남한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61개에 달하는 비정부기구(NGO)와 손을 잡고, 정부가 밤 12시 넘어 제정한 재외동포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11조항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결국 2004년 2월 9일,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다.⁴²

남한에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입장에서 제기되었다. 민족주의적인 논자들은 재외동포법이 모든 인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보편주의적 논자(universal critics)들은 이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돈과 같은 민족주의적 논자들은 같은 선조와 단일 민족이라는 토대에 입각하여, 같은 혈통인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시민을 가진 한국인은 다른 외국 시민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³ 이들은 한국이 식민지 시기와 냉전체제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겪으면서 강제 이주를 당한 한국인들과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동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민족주의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 재외동포법은 정당하다

42) Lee Chulwoo, 앞의 글, 111쪽; Jung-Sun Park and Paul Y. Chang, "Contention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and Ethnic Identities in Global Context: The Case of the Overseas Korean Act," Journal of Korean Studies 10, no. 1 (2005), pp. 1-27.
43) 노영돈, <재중 한인의 국적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44, no. 2, 1999, 87~88쪽.

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단일 민족과 순수 혈통에 기반한 체계 모니적인 논리와 민족주의가 정치와 정책 제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정인섭, 이철우 등과 같은 보편주의적 논자들은 과거의 자발적 혹은 강제 이주자나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의 입장보다, 해외동포 2, 3세대와의 관계와 연대를 중요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설사 이민 1세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대우는 독일이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비자의 요구 규정을 느슨하게 한다거나 출입국의 과정을 좀 더 쉽게 해주는 정도로 해야 하며, 재산권, 투표권, 노동권,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포'라는 개념

해방 이후의 이민 정책은 세계화에 따른 문화 정책의 수립과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에 바탕을 둔 문화 정체성 구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있어서도 이들을 동포, 즉 '같은 민족(co-ethnics)'으로 해석하는 도덕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 재외동포 혹은 디아스포라는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공식

44)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 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 논총》 43, no. 2, 1998, 243~246쪽; 정인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서울 국제법 연구》 6, no. 2, 1999, 315~316쪽; Lee Chulwoo, 앞의 글, 107쪽.

적인 학회, 정치적 성격을 띤 심포지엄, 혹은 민간단체들의 열린 모임들에서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6월 13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6회 '코리아 디아스포라 포럼'이 열렸다. 2005년 포럼은 임영삼과 황영삼의 저서 출간 기념 모임으로 열렸는데,⁴⁵ 임영삼이 말한 '고려인'은 구소련과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한민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⁴⁶

문화통상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5년간의 조사 결과를 책으로 출간 하면서, 임영삼과 그의 공저자는, 그 지역 한인들에 대한 구술사적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2005년을 구소련에 살고 있는 75만 명의 고려인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40년이 되는 해(1865~2005)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였다.⁴⁷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한인들이 한국을 '조국'이 아니라 '역사적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영삼은 "(고려인들이) 자랑스럽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때 자신도 자긍심을 느꼈다"라고 하였다.⁴⁸ 그의 주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해외의 한민족에 대해 도덕적이고 민족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과, 이들, 특히 3~4세대의 잃어

45) 임영삼·황영삼,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참조.

46) 임영삼·황영삼, 앞의 책, 3~5쪽.

47) 두 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고, 이들이 참여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문화콘텐츠연구개발센터의 우리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을 통해 만든 페이지도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http://www.koryosaram.co.kr>; <http://www.culturecontent.com/>)

48) 임영삼·황영삼, 앞의 책, 3~5쪽.

버린 민족 정체성의 회복이 재외동포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려인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⁹

이 심포지엄의 토론에서는 고려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북쪽 지역의 땅의 크기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으며, 탈지역화된 미래의 한국이 고려인이라는 인적 자원을 토대로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발전되었다. 사실 이러한 심포지엄은 매 기념일마다 재외동포 한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학술행사의 일환이었으며, 그 결과물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혈통 중심의 민족주의적 문화 정책에 기반하는 탈지역적인 민족국가의 기획 안에서 재외동포를 정의하고 기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집'이 아니라 '재산'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에 대한 '연구'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사랑'이 본격화되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⁵¹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논리는 재외동포법을 비평한 논리 중 보편주의적 논자들의 입장과 유사하

49) 임영삼·황영삼, 앞의 책, 193~224쪽.

50) 광복 60주년을 맞으며 다음과 같은 책들이 간행되었다. 《세계의 한민족》, 서울대학교 출판사,〈출판부?〉 1996. 이 책은 한국 해방 50주년 기념으로 간행된 10권의 시리즈물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해외의 다른 국가들로 이주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주 이주 100년, 멕시코 이주 120년, 구소련 이주 140년 등을 기념의 해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각종 자료집을 간행했다. 《우즈베크스탄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까자흐스탄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러시아, 사할린, 연해주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 《일본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2; 《미주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3; 《멕시코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4; 윤병석, 《해외동포의 원류》, 집문당 출판부, 2005 등.

51) 임영삼·황영삼, 앞의 책, 서문 ii쪽.

다.

재외동포의 문제나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체는 지구촌 동포청년연대(KIN 혹은 Korea International Network)였다. 창설자이자 사무총장인 배덕호는 그간 잊었던 해외의 한인 사회를 알리기 위해 2000년 KIN을 창설하고 이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KIN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외의 한인들을 '모국'과 연결시켜서, 지구촌의 한 부분으로서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KIN에서 가장 중시했던 활동은, 남한 정부에 압력을 넣어 최근의 재외동포법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해 남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장 최근에 했던 활동은, 일본 오사카의 우토로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을 위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우토로의 재외동포들은 식민지 시기에 강제 노동자로 동원되면서 간사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식민 지배가 끝난 후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2005년 일본 정부가 이들에 대한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거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또 다른 예는 사할린의 한인동포들이다. 우토로 재일 한인하고는 달리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한 재외 공동체 중 하나인 사할린 한인들은 제국 일본의 시민권을 잃은 조선 사람들, 남한도 북한도 아닌 식민지 조선인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나라가 잊어버린 사람들로 불린다.⁵² 그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특별법 제정 백만 서명 운동'과 기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할린 한인들은 귀국을 위한 도움을 한국인들에게 호소하는 편지 쓰기 운동인 '희망

52) 장석홍, <해방 후 귀환 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 문제 연구》,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11~30쪽.

릴레이'까지 펼치고 있다.⁵³ KIN은 남한 정부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모국과의 교류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⁴ 전반적으로 KIN은 재외동포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되고 잊혀왔던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정책, 학계, 그리고 여론 및 민간단체에서 나타나는 동포에 관한 입장, 즉 같은 선조를 가진 단일 민족이라는 토대에 입각하여 같은 혈통인 재외 국민이나 외국 국적 시민을 가진 한국인은 다른 외국 시민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파악하는 시각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재외동포와 그들의 디아스포라를 세계화의 흐름과 관련시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

5. 결론

세계화라는 목표, 그 안에서의 한민족의 문화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책 수립,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포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부

53) 사할린에 관한 자료와 운동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된다. <http://www.sahallin.net>

54) Jeong-Won Bae, "The Fate of Utoro," Peacemaking Issue 5 (November 16, 2005), <http://www.peacemaking.co.kr/english/news/view.php?papercode=ENGLISH&newsno=113&pubno=136>; Jin-Woo Lee, "Groups Unite to Save Last Korean Village of Forced Laborers in Japan," The Korea Times, April 28, 2005; David McNeil and Andreas Hippins, "Kyoto Korea Town Fights for Survival," Japan Focus, July 23, 2005. 우토로와 관련된 활동은 KIN의 웹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happylog.naver.com/kin.do>

수립 이후 재외동포법에 나타난 국적의 정의 등을 통해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국 내의 한국인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들을 한국인으로서의 역사적 경험, 혈통, 친족적 유대관계 등을 공유하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산의 경험과 고통을 겪은 이들로서, 혹은 해외 한인의 모범적 사례로서 파악하고 있다. 해외의 한인이 이러한 한국의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견 간에,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기업, 심지어 교회도 한국의 정책, 비즈니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한인 디아스포라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독일촌'을 건립한 것과 같은 사례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재독 동포들에게 '집 떠나서의 집(home away from home)'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곳을 한국의 관광지로 조성했다는 점, 그리고 조성형 감독이 이 마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이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조화를 이룬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⁵⁵ 현재 남해군과 무안군에서는 두 개의 '아메리칸 타운'이 기획되고 있다. 다만 남한 정부에서는 재미동포가 은퇴한 후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⁵⁶ 이러한 독일 혹은 아메리칸 타운과 같은 특수 지역은 정부와 기업(이 경우는 건축개발업자), 지역정부, 관광부, 재외동포, 그리고 문화 관련 제작

55) 이 다큐멘터리 필름은 2009년 가을에 출시되었다. 관련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 <http://www.hollywoodreporter.com/hr/festival/film-review-home-from-home-1003942698.story>; Home from Home 의 동영상 일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imdb.com/name/nm1776064>

56)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 <http://www.eng.muans.go.kr>; <http://brianddeutsch.blogspot.com/2008/07/muans-american-town.html>

자들이 상호 접촉하면서, 타운의 건립, 관련된 정책, 이데올로기 등에 있어 서로 타협해야 성공 가능한 '접촉 지역(contact zone)'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민족국가와 주된 역사 서술이 살아남고 강화되는 데 있어,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독일타운' 혹은 '아메리카 타운'의 설립은 민족국가의 자본적 이익이나 이미지를 위한 프로젝트다. 이는 아메리카 타운에 입주하려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메리카 타운이 공식 개설되었을 때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 한인들은 과연 얼마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환할 것인가? 이러한 접촉 지역을 새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간 안에서 한국 시민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결국 국가주의 체제로 수렴되는 퇴행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